

주간 통일정세

2016-02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여성단체, ‘위안부 합의’ 비난…“전면 무효”(1/9,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는 8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의 천인공노할 성노예 범죄를 비호하고 덮어주는 쓸개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 으며 전면무효이며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담화는 “괴뢰패당이야말로 과거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일본의 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려는 온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락인(낙인)하면서 공화국의 전체 녀성들의 이름으로 준렬히(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 ‘수소탄 실험’ 중앙통신 “조국통일 자주적으로 풀자”(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애국의 호소에 화답하여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 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어 “외세의존의 종착점은 파멸”이라면서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남조선 당국에 진정 조국통일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동족을 목표로 외세와 함께 벌리는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조국통일에 유리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 그러나 통신은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대규모핵전쟁연습소동은 그칠 날이 없었다”고 비판했을 뿐 수소탄 핵실험이나 핵무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

- 北, 대북 확산기 방송 재개한 날에 “8·25 합의 준수” 요구(1/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8일 ‘민족 공동의 합의들에 토대해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함.
 - 방송은 또 “북과 남이 다 같이 민족 공동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때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지만 어느 일방이 거기서 탈선해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며 “민족 공동의 합의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 바라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라고 주장함.
 - 이어 방송은 “하지만 민족 공동의 합의를 무시하고 그에 도전해 북남관계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려는 범죄적 기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이라고 위협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김기남, ‘대북확성기 방송’ 비난…“전쟁 접경으로 몰아간다”(1/8,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가 8일 우리군의 대북 확산기 방송 재개에 대해 “나라의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음을 일시에 보도함.
 - 김 비서는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연환대회’의 축하 연설에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성공을 배 아프게 여기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벌써부터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다, 전략핵 폭격 비행대를 끌어들이는 등 나라의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함.
 - 이날 군민연환대회에는 김 비서를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태복·곽범기·오수용·김평해 당

비서가 참가했으며,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제1부부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석단에 자리함.

- 北, 비행거리 대폭 늘어난 'SLBM 사출 영상' 첫 공개(1/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년 12월 진행한 인민군대 사업 현지지도 모습을 담은 새로운 기록영화를 방영하면서, 지난 5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때에 비해 비행거리가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SLBM 사출 시험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함.
 - 이 영상에 따르면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 모의탄'(군 당국 추정)은 수면과 거의 직각으로 솟아오르며 바다 위 30~40m 상공에서 굉음을 내며 점화되며 거의 수직으로 비행하면서 구름층을 뚫고 솟구쳐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지난해 5월 북한이 "SLBM의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출시험 모습 사진과 비교하면 각도 및 비행거리에서 빠르게 진척된 개발 수준을 보임.

마. 남북 경제 관계

- 화성기 켜 날도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512명 체류(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남한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화성기 방송을 재개한 8일에도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통일부가 "'어제 개성공단에 체류한 남측 인원은 809명이며, 오늘 하루 동안 315명이 들어가고 612명이 나왔다'고 발표했음을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밤 개성에 체류하는 인원은 512명이며, 내일은 269명이 들어가고 479명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이면서, "평소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900명 수준이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부분도 있지만, 주말을 앞두고 입경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체류인원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우리 軍이 2015년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기구매 계약 체결한 것을 거론하며 ‘호전광들이 무력증강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목적은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라고 비난(1.4, 중앙통신·노동신문)
- ‘외세에 의존해서는 어느 때 가서도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래는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1.4,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 당국은 ‘남북 관계개선 분위기 마련과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보장을 위해 대결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韓美 합동 군사연습 전면 중단’ 주장(1.5, 중앙통신·노동신문)
- 새누리당의 ‘북인권법’ 제정 추진(2015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송년음악회 개최 등)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의 전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고 중단 주장(1.5, 중앙방송·노동신문)
- 새해 국군 훈련(육군6군단 훈련 등)과 합참 의장 등 군부대 방문 발언(백령도 해병대 6여단·철저한 대응 등)에 대해 ‘군부 호전광들의 대결광기, 反北 대결소동’이라고 비난(1.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데 북남관계 개선의 길, 자주통일의 대통로가 있다’며 ‘민족공동의 합의들에 기초한 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1.6, 중앙통신·노동신문)
- 합참의장(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철저하게 대응)과 해군참모총장(적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의 발언 관련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동족대결 광신자들의 의도적인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침략 전쟁연습과 군사적 도발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1.7,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4차 핵실험 관련 “우리(北)의 핵억제력은 전조선 강토를 보호하고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을 지키고 빛내이는 민족공동의 재부”라고 오도(1.8, 중앙통신·노동신문)
- 새해 첫날 우리 군의 훈련들과 합참의장 및 해군참모총장 등의 발언을(적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 거론 ‘우리의 평화애호적 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며 ‘그 어떤 시비도 하지 말아야 하며 평화수호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1.9,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對日 ‘위안부 합의’를 “친일매국 행위의 극치로써 제2의 한일협정”이라고 비난 지속 및 ‘전면무효·반대배격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투쟁’ 선동(1.10, 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 '수소탄'실험> 北매체 “첫 시험 완전성공” 대대적 홍보(1/6,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은 북한 당국이 핵실험 실시에 대해 발표하기 1시간 전인 6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오전 11시30분) ‘특별 중대 보도’가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예고하면서, 예고 보도에서 “전체 조선 인민에게 알린다. 주체 105(2016)년 1월6일 낮 12시(이하 북한의 '평양시')부터 특별 중대 보도가 있겠다”는 고지를 두 번이나 하면서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킴.
 - 각 방송들은 한 시간 뒤인 낮 12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첫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역사적인 명령을 하달’을 제목으로 ‘핵실험 성공’을 동시다발적으로 전하였고, 이에 아나운서들은 “첫 수소탄 시험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강조하며 핵실험의 의의와 이유 등을 강한 어조로 발표함.
 - 조선중앙통신은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는 제목의 ‘조선민 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전문을 내보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소탄 시험 최종 명령서에 서명하는 장면과 서명 내용을 배경 화면으로 내보내며 핵실험이 김 제1위원장의 명령으로 진행됐음을 거듭 알림.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미국의 핵 공갈 격퇴 위한 핵보유 너무도 당연” 주장(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자 논평에서 “미국의 핵 공갈을 격퇴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고 그를 법화(법제화)하고 새로운 병진노선에 따라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2월 미국의 1950년대 핵공격 표적을 나열한 문건이 공개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야말로 인류 머리 위에 첫 원자탄을 터뜨리고 세계제패야망 실현을 위해 핵몽둥이를 휘둘러대는 핵공갈과 핵전쟁의 원흉”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이어 “끊임없이 가증된 미국의 핵위협이야말로 우리를 핵 억제력 강화에로 떠민 근본 요인”이라면서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핵전쟁 도발 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북한 “정의의 수소탄 틀어쥐어…병진노선 관철할 것”(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자 논설에서 “수소탄 시험, 수소탄 보유는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 실행에 발광하면서 무모하게 날뛰수록 당의 병진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지금까지 미국의 핵위협 공갈을 받는 우리나라를 그 어느 나라도 구원 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동정하지 않았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엄혹한 현실에서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기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쥐게 되었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밖에 있는 나라”라며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 시험은 어느 국제법에 비추어보아도 위반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 北 방송매체, ‘수소탄’ 실험 발표 20여회 재방송(1/7,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주요 방송 매체는 6일 낮 12시30분 (평양시간 낮 12시) 처음 방송한 정부 성명 발표 보도를 7일 오전 8시까지 총 26회에 걸쳐 내보냄.
 - 이와 함께 북한 매체들은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간부와 주민의 반응 및 이를 계기로 생산력 증대에 나설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연달아 소개하였으며, 조선중앙방송은 “허천강 발전소가 첫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히 성공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 접한 크나큰 격정과 희희속애 생산적 양양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다”며 주민 반응을 전함.

- 北조선신보 “수소탄 시험, 북한식 경제부흥 본격화 신호탄”(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첫 수소탄 시험 성공, 나라의 안전보장과 경제부흥의 본격화’란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조선에서는 36년 만에 당 대회가 열린다”면서 “무진막강한 전쟁 억제력을 갖춰야 평화스러운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칠 수 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신년사의 ‘강성국가 건설’ 관련 구호를 언급하며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올해의 최우선 과업”이라며 이번 수소탄

실험이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며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자 북한의 오랜 교전국인 미국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함.
 - 또한 신문은 북한이 지난해 1월 미국 측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한 제안과 같은 해 8월 남북 긴장상태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한 제안을 거둬 했는데도 “미국은 (이들 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남조선과 3각 군사동맹의 구축에 주력했다”고 비판함.

■ 北노동신문, 핵실험 이후 연일 신형 무기사진 ‘시위’(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자 신문 3면에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과 신형 반함선로켓 발사 사진을 나란히 실음으로써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연일 신형 무기 사진을 게재함.
- 신문은 사진과 관련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폭음이 온 천하를 울린 오늘날 우리는 구태여 이 탄도탄과 반함선 로켓들의 위력에 대해 논하려 하지 않는다”며 “무진막강한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이 있기에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는 억척으로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수소탄시험으로 경제강국 건설 길 열려”(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사설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기세 드높이 총돌격 앞으로’에서 “첫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야 한다”고 독려함.
- 그러면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타격해 승리)할 수 있는 핵보급을 틀어쥔 우리에게는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당원과 근로자는 존엄높은 핵보유국의 자주적 인민답게 세계적 안목과 대국적 자존심으로 강성국가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일대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또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은 우리 당의 병진노선의 절대불변성과 필승불패성에 대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규정했으며, 2면의 정론에서는 “자위의 핵탄, 이것이 조선의 수소탄의 진정한 이름”이라며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소식은 천만 군민을 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의 총공격전으로 부르는 장엄한 진격의 포성이다”라고 정의함.

- 북한 “이라크·리비아, 핵 포기로 결국 파멸” 주장(1/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정의의 수소탄은 우리의 금지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라크의 싸담(사담) 후세인(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가다피(카다피) 정권은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핵개발 토대를 말끔히 헐리우고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결과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들의 힘에 의한 주권유린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포기하거나 그 개발을 중단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라는 소리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덧붙임.
 - 노동신문도 논평을 통해 “(과거) 이라크는 외화만 있으면 군사 장비를 사오는 것쯤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체의 국방공업 발전에 힘을 넣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강경한 반미국가로 알려진 리비아가 미국의 핵 포기 압력에 굴복하였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대가는 만신창이가 된 것”이라고 전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핵실험’ 이틀뒤 CNN에 ‘과학기술전당’ 개방…선전전 일환(1/9, 연합뉴스)
 -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한 지 이틀만인 8일 미국 CNN방송에 최근 준공한 '과학기술전당'의 취재를 허용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전당 안에서는 많은 방문자가 북한 인트라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앉아 열심히 좌판을 두드리며 교육관련 정보나 선전물을 검색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여기서 만난 공학도인 27세 리 원은 '수소탄 실험'에 대해 "멋지다"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이번 4차 핵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대화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북한 관리들은 거절했으며 다만, 관리들은 이번 핵실험이 "주변 환경에 미칠 방사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실험이 진행됐다"며 "장소도 과거보다 산속 훨씬 깊은 곳이었다"고 주장했다고 CNN은 전함.

마. 대중국

- 日신문 “쑹타오 中대외연락부장, 이달 방북 추진”(1/4, 도쿄신문)
 - 도쿄신문은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중련부) 부장이 이르면 1월 중에 북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양국 사이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4일 보도함.
 - 신문은 쑹 부장의 방북이 실현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바. 대일본

- 北 “위안부 문제, 日 사죄·배상없이 최종해결 없다”(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이번 합의는 백년 숙적인 일본에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천추에 용납 못 할 친일 매국 행위의 극치로서 치욕적인 ‘제2의 한일협정’이나 같다”며 “일본의 성노예 범죄는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 없이는 최종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고 보도함.
 - 대변인은 “더욱이 격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치욕적인 합의가 미국의 막후 조종에 따른 것이라는 데 있으며, 간특한 일본이 미국의 꼭두각시인 남조선 집권 패당을 몇 푼의 돈으로 주물러대 조작해낸 이번 합의는 전면무효”라고 주장함.
 - 이어 “외세에는 아부하고 동족과는 대결하는 이러한 남조선 당국의 사대 굴종 행위로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는 긴장과 전쟁 위기만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범죄 및 강제연행을 비롯한 온갖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IAEA “북한 핵 활동 유엔 결의 위반...깊은 유감” (1/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보도를 통해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힘.
 - 방송은 아마노 사무총장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IAEA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관계국들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국제원자력기구가 핵 사찰 활동을 재개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음을 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 위업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일관한 입장이며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우리(北)는 앞으로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책임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1.4,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은 “핵무기를 기본수단으로 대조선 압살 책동에 매달려 왔다”며 “미국의 핵공갈을 격퇴하기 위해 우리(北)가 핵을 보유하고 그를 법화하고 새로운 병진노선에 따라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핵 보유 및 강화 정당성’ 강변(1.5, 중앙통신)
- 미국의 한국에서 군사연습은 “조선반도를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의 발원지로 만든 근원”이라며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세계평화 보장을 위해 북침전쟁 연습 중단’ 촉구(1.5, 중앙통신·노동신문)
- ‘자주권 존중은 국제적 친선협조관계의 기초로 된다’며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권 존중에 기초하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지배와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1.6,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중대 인권범죄는 실수가 아니라 대외정책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병원 폭격 거론·비난 및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주장(1.8,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이 핵전쟁연습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핵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며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에 대처하여 자위적 조치로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인 첫 수소탄시험을 단행하였다’고 재차 ‘정당성’ 주장(1.9, 중앙통신)
- 北 4차 핵실험 관련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다”며 ‘미국은

이제라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속 주장(1.10,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2016~2017년) 개시 및 '北 인권 쟁점화' 등 역할 강조(유엔 주재 日 대사)에 대해 '미국의 反北 정책에 추종하여 손과 발을 맞추는 거수기, 침략세력의 우리(北)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조소 및 '과거청산' 촉구(1.10,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포사격 참관·새해 첫 군 공개활동(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 사이의 포사격 경기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포사격경기를 보시었다”고 5일 보도함.
 - 이에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우리의 미더운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며 “잘 훈련된 저격무기사수들이 점수판을 정확히 맞히는 것만 같다”고 말했고, “포병무력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사격의 명중률을 높이는 것이며, 인민군대에서는 명포수운동 안에서 무도의 영웅포병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힘.
 - 이번 경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립광일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윤영식 포병국장이 현지에서 김 제1위원장을 맞았으며 서홍찬, 노광철, 조남진, 립철성, 조경철을 비롯한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과 대연합부대 포병지휘관들도 경기를 봤다고 통신은 전함.
- 北김정은, 인민무력부 방문...“수소탄 실험, 자위적 조치”(1/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의 장쾌한 퇴성이 천지를 진감시킨 주체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었다"고 전하마.
 - 김 제1위원장은 인민무력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단행한 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말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민무력부 방문시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이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리수용 北 외무상, 18년 만에 다보스포럼 참석할 듯(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4일 북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북한 관리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1월 20~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WEF)의 연차 총회, 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로 하고 주최측과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보도함.
 - 뉴스는 리 외무상과 함께 윤영석 대외경제성 부총국장과 한웅 농업개발은행 사장 등이 대표단으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면서, 리 외무상 일행의 일정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 사회와 경제 부문에 부는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北 안경호 전 조평통 서기국장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안경호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이 사망했다고 5일 보도하면서, 그의 구체적인 사망 일자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가 김일성훈장 수훈자이며 조국통일상 수상자인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5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제7차 당 대회 독려…“역사적 분수령으로”(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당 제7차 대회를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1면에 싣고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전례 없는 생산적 양양과 노력적 위훈, 과학기술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세에 새로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이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해 생산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과학, 교육, 체육을 비롯한 문화 분야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자랑찬 승리를 위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해야 한다”고 독려함.
 - 신문은 또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며 제품의 질 제고와 설비,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틀어쥐고 강성국가 건설 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함.
- 북한 매체 “김정은 신년사 학습 열기”…1만자 통째 암기 독려도(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올해 전투승리의 무기로 틀어쥐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학습열풍으로 전당(모든 당)이 끓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국토환경보호성 당 위원회는 신년사에 대한 원문학습을 특별히 중시하며 통째로 암기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당 조직에서는 신년사를 원문 그대로 통달한 정무원들의 모범을 일반 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면서 “이것은 성 안의 일꾼들과 정무원들 속에서 신년사 원문 통달 열풍이 몰아치게 하였다”고 설명함.
 - 신문에 따르면 전력공업성 당 조직은 신년사의 체계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게시물들을 사무실 등에 걸었으며, 집체강의도 마련한 상태이고 석탄공업성, 금속공업성, 농업성 당 조직들도 일꾼들과 정무원들을 상대로 신년사의 기본정신과 내용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북 '수소탄'실험> 北, 김정은 서명 공개(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정부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성명 발표 본방송으로부터 1시간 뒤에 내보낸 재방송에서는 본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김 제1위원장의 서명 장면과 서명 내용을 앵커 발표 중간에 배경 사진으로 등장시킴.
 - 방송에 등장한 사진을 보면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12월15일 시험 진행 명령 서명에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김으로써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보게 하라!”고 적었고, 이어 올해 1월3일 ‘수소탄 시험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드립니다’라는 군수공업부 보고가 적힌 문서에 서명과 함께 “당중앙은 수소탄 시험을 승인한다. 단행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기재함.

- 北, 핵실험후 연일 군중대회…“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제4차 핵실험의 ‘성공’을 자축하며 이를 강성국가 건설로 이어 나가자는 군중대회가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양강도, 나선시 등에서 열렸다고 밝힘.
 - 신문은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 소식에 접한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크나큰 희열과 긍지에 넘쳐 최후의 승리를 향해 폭풍쳐 내달릴 불타는 열의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 안은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선군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을 완전히 성공시킨 그 기상, 그 본때로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돼 있다”고 전하며 군중대회가 열린 각 지역에서는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경제개발 과업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고 소개함.

-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北)의 투쟁 목표이고 성스러운 혁명 임무’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경제 강국 건설에

-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1.4,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 1월 5일 김일성광장에서 김수길(평양시 黨 책임비서) 보고와 결의 토론(노동계급 대표, 전창국) 등 순으로 진행(1.5,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책공업종합대학, 1월 4일 김정일 현지지도(1.4) 1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1.5,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6일 설맞이공연에 참가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해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 마련(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청년전위들과 노동계급·직맹원들'의 궤기모임, 1월 6일 청년공원 야외극장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진행(1.6, 중앙통신)
 - '김정은 신년사' 관철 위한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궤기모임, 1월 7일 김정순(여맹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당창건기념탑 광장에서 진행(1.7, 중앙통신)
 -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경축' 평양시 군민연환대회, 1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1.8, 중앙방송·중앙통신)
 - 쏘민은 "첫 수소탄 시험의 성공에서 백배, 천배의 힘과 용기를 안고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돌격, 총매진 해야 한다"고 독려하며 '자강력제일주의' 추동(1.8,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김정은 신년사 관철' 농업근로자·농근맹원들 궤기모임, 1월 8일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보고) 등 참가하 진행(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경축' 평안남도·남포시 군민연환대회, 1월 10일 각각 진행(1.10,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김정은 신년사를 이행하라'...北, 연일 생산량 독려(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4일 "새해 벽두부터 각지 탄전에서 생산적 양양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순천, 덕천, 북창, 천내지구탄광연합기업소가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또한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 대한 올해 첫 파철(고철)집중수송이 있었다"며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 신년사를 피땀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일꾼들이 수많은 파철을 모아들었다"고 전했고, 이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김원만 직장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강철직장 노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이미 마련된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해 철강재 생산을 늘여 나가겠다"고 밝힘.

나. 주요 조치

- 북한의 유일한 국제영화제 '평양영화축전' 9월 개최(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평양국제영화축전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인용하여 북한의 유일한 국제영화제인 제15회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오는 9월 16~23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5일 보도함.
 - 뉴스는 영화 조직위에서 영화제 출품작을 6월 말까지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를 통해 받을 예정이며, 고려여행사가 영화제 기간에 맞춰 개폐막식 참가 및 영화 관람, 금수산태양궁전을 포함한 평양 시내 관광 등을 포함한 영화제 투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北 새해 첫 운행 토종 지하철동차 명칭은 '붉은기'(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우리 지하철동차 1호'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오늘도 우리 자강력의 상징으로 힘차게 내달리는 '붉은기' 1호 전기기관차가 어떻게 태어났던가"라고 언급하면서 지하철동차의 자체 제작 과정과 명칭 부여에 관한 자세한 경위를 소개함.
 - 신문은 우선 "우리 수령님, 로동(노동)계급이 단 1년 남짓한 기간에 마지막 나사 한 개까지도 100% 자기 손으로 만든 첫 전기기관차를 레루(레일) 우에(위에) 올려 앉혔을 때에는 한여름의 폭양도 아랑곳없이 보고 또 보시며 '붉은기'라 부르자고, 기관차의 앞머리에 휘날리는 붉은기를 만들어 붙이라고 얼마나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던가"라고 밝힘.
 - 그러면서 신문은 또 "한 번도 지하철동차를 설계해본 경험도 없고 제작자들 대부분은 기업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세대들이었지만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몇몇 장치들만은 수입하자는 의견이 튀어나왔을 때에도 단호히 일축해 버리었다"라고 자체 기술로 개발했음을 강조함.

- 北 "식료공장서 세계 경쟁력 제품 쏟아져" 선전(1/7,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7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최우수제품들이 쏟아져 나온다'란 글에서 "최근 공화국(북한)에서 식료공업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이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식료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 이바지하고 있다”며 모범 사례로 선홍식료공장을 소개함.
- 그러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료품들은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최우수 제품들”이라며 공장이 생겨난 지 10여 년으로 식료품 생산 역사가 짧지만 “종업원 일인당 한해 이득금을 조업후 첫 생산연도에 비해 무려 350배로 늘인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공장으로 이름 떨치고 있다”고 치켜세웠고, 이런 ‘피타는’ 노력 속에 공장은 지난 4년간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인 영양 단묵을 비롯한 90여 개의 새 제품을 개발하고 9개의 생산 공정이 식품안전관리 체계인증(ISO 22000)을 받았다고 선전함.

다. 경제 상황

- 北 신문에 ‘학원광고’ 등장...“시장경제요소 확산 영향”(1/5, 평양신문)
 - 평양신문은 5일자 신문 4면에 평양 태권도 학원이 낸 것으로 보이는 ‘2016년도 태권도 학원 학생 모집’ 광고를 게재함.
 - 광고는 고급중학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분홍색 바탕 위에 그림과 함께 굵은 활자로 실려 같은 지면의 다른 기사와는 차이를 보임.
- 북 해외식당 접대원 무임금 노동(1/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해외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대부분 노동에 대한 대가(임금)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면서, 중국 소재 북한 식당들의 종업원들은 대부분 평양소재 대학의 학생들과 졸업생들이므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에 중국 변경도시의 북한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20대 초반의 여성은 “우리는 모두 실습생으로 여기 와서 일하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않는다”면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봉사원은 실습생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혀 장학금 명목으로 약간의 생활비를 받는 것 말고는 사실상 무임금으로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이 “과거에는 북한식당 종업원은 평양상업대학 졸업생들을 봉사원 자격으로 파견하고 많지는 않아도 일정액의 노임을 지급했다”면서 “실습생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은 그나마 노임을 주지 않으려는 북한당국의 꼼수”라고 주장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평양꾸리기에 지방 외화 고갈 (1/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 중국 대북 무역관계자의 말을 통해 김정은 제1비서의 지나친 자금 수탈로 인해 지방 무역일꾼들이 외화가 없어 중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돌을 계기로 평양시 중심구역에 유럽풍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백두산청년 발전소 등을 완공하면서 지방에 과도한 외화조달 지령을 내린 상태이며, 북한 무역상들은 당국의 수산물 수출 금지 지시로 인해 외화원천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함.

- “北 당창건일 ‘생활비지급’은 ‘공수표’…옥수수 1kg에 성매매”(1/8, 도쿄신문)
 - 도쿄신문은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 중국 동북지역에서 만난 북한 주민 이야기를 토대로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8일 보도함.
 - 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4년간 북한에 고층 아파트나 고급 식당이 선보이게 된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에게 돈벌이가 허용된 결과이며 이와 더불어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생활고 때문에 옥수수 1kg을 대가로 받아 성매매하는 젊은 농촌 여성이 늘고 있으며, 외화를 벌려고 외국에 파견되는 노동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으려면 의사에게 100달러를 내거나 기업 지배인에게 200달러를 내는 식으로 뇌물도 횡행하고 있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호주, 2016년 WFP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220만 달러 기부(1/5,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세계식량계획(WFP)이 31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22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5일 보도함.
 - 방송은 호주 외교부 (DFAT) 대변인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이 같은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으며, 현재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전함.
 - 그러면서 방송은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평균 4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해 왔다고 밝혔으며, 호주가 지난해에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23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 ‘2015년 상반기 북한-싱가포르 교역액 감소’(1/5,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북한과 싱가포르 간 교역액이 약 2천170만 달러 (\$ 21,714,000)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액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6% 줄어든 수치라고 5일 보도함.
 - 방송은 두 나라 교역이 대부분 북한에 대한 싱가포르의 수출로, 2천40만 달러 (\$20,483,000)를 기록해 2014년과 비교해 12.9% 감소한 것이며, 수입은 2015년 6월 기준 120만 달러 (\$1,231,000)로 수입이 없었던 2014년 상반기와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함.
 -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2015년 상반기 주요 대북 수출품은 담배와 담배 관련 재료, 담배 관련 기기이며 이 외에도 종이, 부직포, 알루미늄,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등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 수출되었고, 싱가포르는 북한에서 인삼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됨.
- “WFP 작년 대북 식량지원 2만4천...19년만에 최소”(1/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을 모두 합하면 2만 4천561t으로, 199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라고 6일 보도함.
 - 킨 대변인은 이 같은 수치는 18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던 2014년 2만 7천204t보다 2천643t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특히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이 감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중국, 지난해 북한 라진항 통해 식량 600t 운반(1/6,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6일 보도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식량 600t이 중국 지린성 훈춘시를 떠나 북한 라진항을 경유해 상하이로 운송됐으며, 이는 중국의 남북 지역을 잇는 제3의 식량 운송통로가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통신은 훈춘에서 라진을 통해 상하이로 가는 바닷길은 평균 이틀 반, 길어도 사흘 정도가 걸린다고 전했으며, 이에 지린성 식량국 관리통제처 왕타오 처장은 “훈춘이 항구를 빌려 바다로 식량을 운송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의가 크다”며 “제3의 식량 운송통로의 미래가 밝다”고 밝힘.
 - 그러면서 통신은 특히 라선항이 현지 물류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됐다고 하며, 2010년에는 라진항을 통해 석탄만 운송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식량과 목재, 광석분말 등으로 운송물품이 확대됐다고 덧붙임.
- 중국 지린성, 새 북-중 경제합작구 조성 계획 발표(1/6, 지린일보,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중국 지린일보를 인용하여 지린성 전면심화개혁소조위원회가 지난달 16차 회의를 열고 지안시에 북-중 경제합작구 1곳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앞으로 5년 동안 5천355 에이커의 면적에 100억 위안, 미화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지안에 경제합작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6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지린성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안시에 북-중 경제합작구를 신설해 남쪽 지안과 북쪽 훈춘을 대외 개방의 중요한 두 날개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지린성 관계자는 이에 지안 지역에 북-중 경제합작구가 들어서면 북쪽 두만강 유역의 창지투 선도구와 남쪽 랴오닝성의 해안경제지대가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지린성 정부는 북-중 경제합작구 조성과 병행해 지안 주변관광 사업을 활성화해 이 분야에서 2020년까지 800억 위안, 12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겠다는 계획 및 북-중 경제합작구 신설과 연계해 평양으로 들어가는 고속철도와 백두산 지역과 지안, 그리고 단둥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함.
 - 지난해 1~11월 미-북 교역, 전년도 19% 수준 급감 (1/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8일 미국 상무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60만 달러 (\$4,593,000)로 집계됐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수치는 2014년도 같은 기간 (\$23,900,000)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그나마 전액이 미국의 대북 수출이었다고 전함.
 - 방송은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85%가 넘는 390만 달러 (\$3,942,000)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밖에 기타 식품이 45만 달러, 닭 등 ‘가금류’ 수출이 5만6천 달러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 성·중앙기관들, 1월 3일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 대한 올해 첫 파철 집중 수송 진행(1.4, 중앙방송)
- 황해북도·강원도에서 1월 4일 하루 동안 ‘수만 거름을 농촌에 지원’ 보도(1.5, 중앙방송)
- 흥건도간석지 건설장, 1월 6일 ‘10만산 대발파’ 진행(1.7,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작년 입국 탈북민 1천277명...김정은 체제 후 53% 급감(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4일 통일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김정은 체제 출범 이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음을 보도하면서, 2015년 초부터 12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1천277명으로 집계되어 2011년도 2천706명에 비해 52.8% 감소했다고 밝혔다.
 - 뉴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국경단속 및 감시가 강화되면서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2011년 2천706명에서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 등으로 빠르게 줄었다고 전하면서,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하여 뉴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 여성 비율이 80%선을 넘었으며 이는 장마당에서 장사 등을 하는 여성이 고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보다 통제를 덜 받는 데다, 국경을 넘은 뒤에도 가사도우미 등 신분노출 위험이 크지 않은 직종에서 남한행에 필요한 비용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 특권층, 남한 가요축제에 관심(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 고위층들이 한국 문화에 매력을 느껴 지난해 연말 한국 TV에서 방영된 가요축제 녹화물을 구해달라고 요구했음을 4일 보도함.
 -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가요대축제 동영상을 녹화한 CD나 메모리 기억장치를 구해달라고 하는 데 원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하면서, 특권층 자녀들은 특히 남한 연예인들이 연말에 모여 진행하는 시상식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밝힘.
 - 그러면서 “지난해 평양에서는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암암리에 돌고 있었다”며 “보위부 요원들의 입에서 김수현이나 전지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다”고 설명하면서, 평양 특권층들은 연예인들의 세련된 의상이나 화장법을 따라하는 추세라고 강조함.
- 北 핵실험에 주민들 백두산 화산 폭발 우려(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지난 6일 단행한 '수소탄' 실험 탓에 양강도 주민들이 백두산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양강도 대홍단군의 한 소식통은 RFA에 “이번 수소탄 실험의 충격으로 백두산 천지와 삼지연 호수의 물이 심하게 출렁거렸다는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홍단군 주민들은 휴화산 상태인 백두산이 분출하지 않을까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함.
 - 4차 핵실험 당시 훈련이란 명목으로 일주일간 대피했던 삼지연군과 보천군 주민들도 “이러다 정말 백두산이 폭발하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소개함.

- '고생한 보람'vs'정치놀음'...“핵실험 北주민 반응 엇갈려”(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9일 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일부 젊은 세대는 필요한 자금과 기술,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핵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응을 전함.
 - 반면 북한의 다른 소식통은 “집권 5년 동안 지도자로서 업적이 없는 김정은이 주민 지지와 지도자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벌인 무력 시위”라며 “수십 년간 핵개발과 군사강국을 부르짖었지만 인민생활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지적함.

-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이어달리기> 대열, 황해남도 통과(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 신년경축 음악회(1.1, 인민문화궁전 개막), 1월 5일 종료(1.6, 중앙방송)
- 함경북도 육아원·애육원 청진시에 건설 준공식, 1월 8일 전승훈(함경북도 黨 책임비서 준공사) 등 참가下 진행(1.8, 중앙통신)
- 송도원 국제 소년단야영소에서 학생 소년들의 첫기 겨울철 야영시작 모임, 1월 8일 진행(1.8, 중앙통신)
- 새해 첫 '체육의 날' 즈음 성·중앙기관(전력공업성 등) 일꾼들 집단달리기, 1월 10일 2개조로 나뉘어 만수대거리·평양대극장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1.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이어달리기' 대열, 1월 10일 평양 도착(*1.5, 남포시 통과) 및 김수길(평양시 黨 책임비서)·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만경대구역 대평동 出迎(1.10, 중앙통신·중앙방송)
-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인민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1.10,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 수소탄 실험, 1~3차 핵실험과 다른 점은(1/6, 연합뉴스)
 - 북한은 1~3차 핵실험 전에는 장거리로켓을 쏘지만 이번 4차 핵실험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뒤 전격적으로 이루어짐. 이는 개발 중인 SL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임을 과시하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은 장거리로켓을 발사(7월 5일)한지 3개월 후에,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은 장거리 로켓 발사(4월 5일) 50일 후에,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은 은하로켓 3호 발사(2012년 12월 12일) 2개월 후에 실시되었음. 또한 1~3차 핵실험 전에는 장거리로켓을 쏘지만 이번 4차 핵실험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뒤 전격적으로 실시됨.
 - 1~3차 핵실험은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이루어짐. 세 차례 모두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을 예고하는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발표나 징후가 전혀 감지되지 않아, 북한문제 전문가들조차도 북한이 4차 핵실험 시점을 왜 연초로 선택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북한, 지난달말 SLBM 시출실험 성공(1/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말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국 보수성향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이 미국 국방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1일 동해 신포항 부근에 있는 수중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음. 이는 실패로 판명된 지난해 11월 28일 실험에 뒤이은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함.
 - 워싱턴 프리비컨은 이번 SLBM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고 밝히면서도 수면 밖으로 사출되고서 엔진이 점화됐는지, 또 실제로 미사일이 비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짐.
- 북핵 전문가 헤커, 북 핵실험 최대 우려는 기술 향상·소형화(1/8, 연합뉴스)
 -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8일 센터 사이트에 게재한 북한 핵실험

에 대한 Q&A를 통해 이번 실험을 통해 북한 핵의 소형화 기술 향상을 최우려 사안으로 지목하였음. 헤커 교수는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해 “수소탄일 가능성은 적지만 그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습득했을 핵기술의 향상이라고 지적함.

- 헤커 교수는 북한이 실험을 감행했고, 실험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들은 폭탄 설계에서 더욱 뛰어난 정교함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측면이라 언급하였음.
- 한편, 2단계 구조의 수소탄보다는 그 중간단계로 원자탄의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 수소연료(실제 수소동위원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였음. 이는 궁극적으로 2단계 수소탄을 완성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차핵실험 전후 외관상 큰 변화없어(1/8, 연합뉴스)

-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존스홉킨스대 조엘 위트 연구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6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입구 부근에서 광물 운반용 차량이 드나드는 등 일부의 움직임만이 포착됐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함.
- 이 사진은 핵실험 이후 40분인 북한 시각으로 6일 오전 10시40분 촬영되었음. 위트 연구원은 지난 1일 촬영된 사진과 비교했을 때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서 두드러진 외견상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밤에 준비하거나 차폐막을 사용하는 등 핵실험 준비를 철저히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성사진 촬영의 시간차이 때문에 포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음.
- 이에 따라 한·미 정보당국이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됨.

■ 北, 비행거리 대폭 늘어난 SLBM 사출 영상 첫 공개(1/8,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5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때에 비해 비행거리가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SLBM 사출 시험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음.
- 북한 조선중앙TV는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인민군대 사업 현지도 모습을 담은 새로운 기록영화를 방영함. 북한이 새로운 SLBM 사출시험 영상을 공개한 것은 지난 6일의 수소탄 실험에 이어 핵 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임.

- 김 제1위원장과 수행원의 옷차림으로 미뤄 사출시험 영상은 지난해 12월 21일
께 동해상에서 실시한 SLBM 사출시험으로 추정됨.
- 北김정은, 인민무력부 방문…수소탄 실험, 자위적 조치(1/10,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4차 핵실험 이후 인민무력부를 방문해
‘수소탄 실험’을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함.
 - 김 제1위원장은 인민무력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새해 벽두에 우리가 단행한 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
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
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음.
 - 북한의 지난 6일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
에서 김 제1위원장의 관련 언급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러나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인민무력부 방문이 언제 이뤄졌는지 정확한 시점은 밝히
지 않았음.
- 국제사회 北돈줄 차단 시동…유엔·美中日, 금융·무역제재안(1/10,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경제와 금융부문의 추가 제재 등을 담은 결의안 마련
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독자 제재’ 행보에 나섬.
 - 대북 제재안의 대부분은 북한 선박의 입항제한과 무역 규제, 제3국 송금 억제,
현금유입 차단 등 ‘북한 돈줄 말리기’에 집중되었음. 이란 핵협상에서 효과를
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수준의 금융 제재도 검토되고 있음.
 - 한국은 선(先) 안보리 제재·후(後) 양자 차원 제재 방침 아래 안보리 제재에
담기지 않은 조치는 한미 양국 차원에서 다루기로 결정함. 중국은 통관검사,
금융 거래, 여행 등에서 제재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 속에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짐. 다만, ‘원유 제한’ 항목은 북한
의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임. 일본은 인적
왕래와 금융·경제 등 크게 두 부문에서 독자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알려짐.
- 한미일 공조 시동, 이번 주 차관·6자수석 회동할 듯(1/10, 연합뉴스)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한 한미일 차원의 공조를 모색하는 협의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릴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추가제재 및 실효적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려는 공조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임. 차관 협의회 일정으로는 오는 16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을 바탕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 추가제재를 위해서는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중국 설득전에 나설 것으로 보임.

나. 미·북 관계

- 북, ‘수소탄’ 실험, 美의원들 성토…한반도에 사드 배치해야(1/7, 연합뉴스)
 - 북한이 6일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전격으로 발표하자, 미국 의원들은 앞다퉈 북한을 성토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였음.
 -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주장을 도발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더욱 압박하는 것”이라고 단언함.
 - 또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드 문제를 공개 거론하였음. 마이크 로저스(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성명에서 “이제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승낙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며 사드 배치를 주장하였음.
- 美전문가들, 대북 전면제재 한목소리…봉쇄론도 등장(1/7, 연합뉴스)
 -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원 동북아 선임연구원은 “이번 수소탄 실험은 북한이

-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단기로는 기존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장기로는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함.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이번 실험에 따라 경제금수 조치를 취하거나 북한 항공기들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유엔 차원의 대응은 물론, 미국 자체의 양자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무기거래에 관여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제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美전문가들 수소탄 실험? 가능성 낮아 일축(1/7, 연합뉴스)

- 미국의 핵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성공 주장에 대해 ‘기술적 이유’를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북한이 현 단계에서 공식 핵보유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중·러)만이 보유한 수소탄 제조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든데다가, 수소탄에 쓰이는 중수소화 리튬과 같은 연료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낮다는 것임. 그보다는 수소폭탄용 핵물질을 일부 이용해 기존 핵폭탄의 폭발력을 증강시키는 실험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의 대표적 핵 전문가로 꼽히는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성공적인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으로 보기에 폭발력이 너무 약하다.”고 밝힘. 또 다른 북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의 기술적 정체가 미스터리”라면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 성공 주장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냄.

■ 北 핵실험 이틀 뒤 CNN에 과학기술전당 개방…선전전 일환(1/9, 연합뉴스)

-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한 지 이틀만인 8일 미국 CNN방송에 최근 준공한 ‘과학기술전당’의 취재를 허용하였음.
- 이는 “수소탄 실험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방의 평가절하를 반박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당위성과 ‘과학 입국’으로서

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선전의 일환으로 풀이됨.

- 미국 방송 중 유일하게 평양에서 활동하는 CNN은 이날 대동강 쭉섬에 지난 1일 준공한 과학기술전당을 취재하였고, 전당 안에서는 많은 방문자가 북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앉아 열심히 좌판을 두드리며 교육관련 정보나 선전물을 검색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음.

다. 중·북 관계

- 中, 북한항구 빌려쓰기 본격화…北 나진항 통해 식량·목재운송(1/5, 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남방지역으로 식량·목재 등을 운송하기 시작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함.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운항업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식량 600t이 훈춘을 경유하는 바닷길을 통해 상하이(上海)로 운송되었음.
 - 통신은 “이는 철도를 이용한 직접운송 방식과 철도-선박, 도로-선박을 활용한 연계운송 방식 이외에 남북지역을 잇는 제3의 식량운송 통로가 뚫렸다는 것을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함. 지린성 식량국 관리통제처 왕타오(王濤) 처장은 “훈춘이 차출항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를 통해 식량을 운송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의의가 중대하다.”고 언급함.
 - 통신은 또 훈춘에서 10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나선항이 ‘차출항해’, ‘내무외운(內貿外運·국내상품을 외국을 통해 운송)’을 현지 물류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2010년(나진항을 통한) 운송물품은 석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식량, 목재, 광석분말로 확대됐다.”고 보도하였음.
- 中, 북국경 지대에 병력 증원(1/6, 연합뉴스)
 - 북한이 6일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이후 중국군이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병력을 증파했다는 분석이 나왔음.
 - 홍콩의 인권단체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는 이날 중국군이 북한의 실험에 대응해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3천 명의 병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고 동방일보 인터넷판에서 보도함.
 - 앞서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는 지난달 14일 중국군 퇴역 인사를 인용, 중국 인민해방군이 12일 저녁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베이징 공연이 무산된 직후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북중 국경지대로 2천명의 병력을 증파했다고 전함.

- 中, 北핵실험 결연히 반대…북한대사 불러들일 것 공식성명(1/6,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6일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결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성명을 발표함.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확산을 방지하며,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굳건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조선(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하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함.
 - 화 대변인은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음. 특히 “우리는 당연히 조선의 고위 관원, 대사를 불러 우리의 엄정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며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할 계획이라는 점도 확인함.

- 中전문가, 김정은 방중 무산 가능성…북중 협로(1/6, 연합뉴스)
 -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6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핵실험으로 북중관계가 포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험난한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스 교수는 지난달 북한 모란봉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포기하고 철수했을 당시 공연 취소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에 대한 중국의 불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음. 그는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계속 선군정치를 고취하며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면 이는 중국의 뺨을 때린 격”이라고 언급함.
 - 그는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 10월 방중하면서 북중관계가 호전되는 듯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정책이 변하지 않고 수소폭탄 개발을 계속 공언하는 한 과거로의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中, 지재룡 북한대사 불러들인 듯…구체적인 내용은 함구(1/7,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7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 지도자가 이미 조선(북한) 대사관의 책임자에게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정부는 전날 이미 외교부 성명을 통해 조선이 다시 진행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 대사를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한 항의를 표시했다는 뜻으로 해석됨. 그러나 지 대사의 조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중국 전문가들, 中, 북한 핵실험에도 대북 제재 수위는 제한적(1/7, 연합뉴스)
 -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협조하는 등 더 엄격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국가가 전략적 계산에 따라 원하는 수준으로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짐.
 - 차이젠(蔡建) 푸단(復旦)대 한국학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을 야기하거나 붕괴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려 하기 때문에 제재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스인홍(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 뒤 상황이 나아지면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위사오화(虞少華)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보협력연구부 주임은 명보(明報)에 중국 측이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관계의 전부가 아니므로 북중 관계 기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전망함.
- 中정부, 북한,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사전 소통 안했다(1/8,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사전에 중국 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중국에 핵실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냐’는 질문에 “조선(북한)은 사전에 중국 혹은 기타 다른 방면(方面·미국 등 다른 국가들을 지칭)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그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사전에 아무 것도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음.
- 北, 북중접경 한국 취재진 철수시키라 중국 당국에 요청(1/8, 연합뉴스)
 -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이후 한국 언론들이 북·중 접경에서 현지인들의 반응 등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자 북한 측이 예민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짐.

- 8일 중국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사흘째 한국 언론을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북한 측이 현지 당국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함. 북한 측은 북중 접경 취재에 나선 일부 한국 취재진이 북한 외교시설 등을 상대로 밀착취재에 나섰다며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 북한의 항의를 받은 중국 현지 당국은 8일 국내 취재진이 접경지역에서 사진 철수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한국 외교공관에 알려옴.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북한이 북중 접경의 자국 대표부나 금융시설 등에 대한 한국 언론의 취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취재진이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함.
- 中, 동북 관광업자들에 북한쪽으로 접근말라 지시<교도>(1/10, 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동북 지역 관광업체들에 관광객들을 북한 쪽으로 접근시키지 말라는 중국 당국의 긴급 지시가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시에서 압록강 유람선을 운항하는 중국 관광회사 관계자는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당국으로부터 ‘북한 쪽으로 지나치게 배를 접근시키지 마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소개했음.
 - 이런 지시에 따라 관광업자들은 9일 북한 쪽으로 배를 접근시키지 않았고, 이와 함께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가 있는 함경북도와 접한 지린(吉林)성 투먼(圖們) 시의 관계자는 북중 국경에 있는 교량을 관광하는 프로그램이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고 신문은 밝힘.

라. 일·북 관계

- 日, 중대한 위협…안보리 긴급회합 요구(1/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음. 일본은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유엔 차원과 별도로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수소탄 시험’을 했다는 조선중앙TV의 ‘특별중대보도’나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결과 “오늘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실험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함.
- **日전문가들, 북일협상 단절 가능성(1/6, 연합뉴스)**
 - 일본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상이 단절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음.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일본과는 어느 정도 (납치문제) 교섭을 하고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미국과의 외교를 생각해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음. 또한, 이번 실험 때문에 북일 교섭이 끊길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져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할 것이라 예상함.
 - 박정진 쓰다주쿠(津田塾) 대학 국제관계학과 조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그동안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시위’를 한 것으로 보았음. 아베 정권으로서는 강경책 등 자신의 뜻대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음.
- **日신문 폭거·만행 격한 단어로 北비판…중국이 나서라(1/7, 연합뉴스)**
 - 일본 신문들은 ‘폭거’, ‘만행’ 등 격한 용어를 써가며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 구축과 중국의 압력 행사를 촉구함.
 - 7일자 아사히·요미우리·마이니치·도쿄신문 등이 통단 사설을 실는 등 도쿄에서 발간되는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사설을 게재함.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진상이 무엇이든 어리석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한정된 국가 자원을 잘못된 국책에 쏟아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인 폭거”라고 비판함.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사설은 이번 실험을 ‘만행’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해 강한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이어 “중국은 북한에 큰 타격이 되는 에너지 공급 중단까지 포함하는 단호한 압력으로 핵 포기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본도 2년전 완화했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北, 위안부 문제, 日 사죄·배상없이 최종해결 없다(1/7, 연합뉴스)
 - 북한은 7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일본의 성노예 범죄는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 배상 없이는 최종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며 맹비난함.
 -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번 합의는 백년 숙적인 일본에 민족의 이의를 팔아먹은 천추에 용납 못할 친일 매국 행위의 극치로서 치욕적인 ‘제2의 한일협정’이나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음.
 - 덧붙여, “간특한 일본이 미국의 꼭두각시인 남조선 집권 패당을 몇 푼의 돈으로 주물러대 조작해낸 이번 합의는 전면무효”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범죄 및 강제연행을 비롯한 온갖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日, 北핵실험에 다자외교 발언권 키운다…대북제재 주도 욕심(1/8, 연합뉴스)
 - 이달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임기 2년) 자리에 다시 오른 일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제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추세임.
 - 실제 일본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직후부터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6일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를 만나 공조를 재확인한데 이어 아베 총리는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로 회담하였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실험이 “명백하게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대응하면 좋겠다.”고 언급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동의한다.”고 반응했다고 전해짐. 이는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력하자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 日국회, 북핵실험 엄중히 항의하고 단호히 비난, 결의안 채택(1/8, 연합뉴스)
 - 일본 국회는 8일 북한의 핵실험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정부에 대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유일한 피폭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며 “엄중히 항의하고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신속히 모든 핵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해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음. 이와 함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등 단호한 조치로 핵,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함.

■ 아베 日총리도 北핵실험, 수소탄실험으로 보기 어렵다(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당시 관측된) 지진 규모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음. 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러나 실험을 위해 통상 수소탄보다 폭발규모를 작게 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기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과 맞물려 생각하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새로운 결의안이 신속하게 채택되도록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며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을 확실히 다하겠다.”고 덧붙임.
- 한편,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진 규모를 놓고 볼 때 일반적인 수소탄 실험으로 보기 힘들다.”고 아베 총리와 같은 발언을 했음. 총리와 방위상 등 일본 정부 각료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 피력한 것은 처음임.

■ 日 대북 독자제재 본격 검토…대북송금·북한왕래 어려워진다(1/8, 연합뉴스)

- 일본은 8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등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함.
- 일본 정부는 대북 송금, 현금 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짐. 현재 일본은 3천만 엔(약 3억500만원)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 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당초 300만 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 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를 의무화 했었으나 2014년 5월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 노력에 합의하면서 기준액이 높아졌음.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는 종전 기준액으로 돌아가는 방안은 물론 종전 기준액보다 신고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짐.

- 아베, G7 주요 의제로 북핵 상정 방침(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월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안보상의 중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전면적인 핵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정상선언에 담을 생각이라고 교도는 전함.
 - 이와 함께 아베는 3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벨기에에서 4월말 개최 예정인 일본-유럽연합(EU) 정기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는 기회도 활용해 북핵 문제를 강조할 예정으로 알려짐.

- 아베, 日 독자적 對北제재 검토 지시했다…납치문제 대화는 계속(1/1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일본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 “단호하고 의연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힘.
 - 그는 이날 NHK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의) 독자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결속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힘. 또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새로운 제재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미국과 확실하게 협력하면서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도 아베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극동 방사능 수준 변화없어(1/6, 연합뉴스)
 - 러시아 당국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한 뒤에도 북한과 인접한 극동 연해주 지역의 방사능 수준에 변화가 없다고 밝힘.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연해주 기상당국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주장 이후 현지 방사능 수준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방사능 수준은 시간당 9 마이크로 뢰트겐(μR)으로 허용치보다 오히려 낮다.”고 설명함. 허용치는 시간당 25~30 μR 임.
 - 이 관계자는 “핵실험이 지하에서 이뤄졌고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해주 지역과 다른 러시아 지역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연해주 하산 지역의 방사능 수준은 아직 측정하지 않았지만,
관련 지시가 내려오면 측정에 나설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러시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푸틴, 관련 조사 지시(1/7, 뉴시스)
 -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이는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현지 뉴스통신 스푸트니크가 6일(현지시간) 보도함.
 -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이는 핵무기 개발 단계에 있어 북한의 새로운 행보로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힘.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며 “푸틴 대통령은 강한 유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신중하고도 철저한 진위과약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동맹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러시아 외무차관, 북한 문제, 정치적 해결 외 대안 없어<VOA>(1/8, 연합뉴스)
 -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치적·외교적 해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7일 보도함.
 - 이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의 이고르 모르굴로프 차관이 6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함.
 - 모르굴로프 차관은 특히 역내에서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짐.

바. 기타

- WFP 작년 대북 식량지원 2만4천…19년만에 최소<VOA>(1/6, 연합뉴스)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해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19년 만에 가장 작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WFP 아시아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을 모두 합하면 2만 4천561t 으로, 199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라고 밝힘.
- VOA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이 감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공장 가운데 5곳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함. 한편, WFP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2016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카터 美국방, 한국 방위공약 재확인…모든 확장억제수단 제공(1/7,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을 가동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함.
 -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6일 밤에 한 전화 통화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짐.
- 北 4차 핵실험 도발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가속화 전망(1/7, 연합뉴스)
 - 한미일 3국 공동의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능력 수준이 ‘수소탄’ 개발로까지 이어질 상황에 직면한 만큼 3국이 군사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한미 양국 군 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즉각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데 착수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힘.

-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작년 말 한일 위안부 협상의 타결로 한일 군사협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개선된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이란 공동의 위협이 발생한 만큼 양국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미국, 한반도에 전략자산 추가배치 검토…모든 옵션 고려(1/8,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짐.
-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으로부터 이번 핵실험과 관련한 상황 보고를 받고 역내 동맹들과 군사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쿡 대변인은 전함.

■ 美, 北핵실험 나흘만에 B-52 한반도 급파…대북 확성기 사흘째(1/10, 연합뉴스)

-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의 핵실험 나흘만인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격 투입됐다가 꺾으로 복귀함. 미국의 전략무기가 애초 예상보다 빨리 전개된 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중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추가 도발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과 미국은 이날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가 괌의 앤더슨 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했다고 동시에 발표함. B-52는 오전 앤더슨 기지를 출발해 정오께 오산기지 상공에 도달했으며, 이왕근 공군작전사령과 테런스 오샤너시 미 7공군사령관은 이날 B-52가 오산기지를 통과할 때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 이 사령관은 “한미 연합공군력은 유사시 긴밀한 정보 공유와 강력하고 정밀한 화력을 바탕으로 적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도 “오늘 있었던 비행은 한미동맹의 힘과 역량을 보여준다.”며 “한미 간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우리의 안정 및 안보를 위협하는 적에게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음.

나. 한·중 관계

- **중왕이, 北비핵화·평화·대화로 해결, 하나라도 빠져선 안돼(1/9,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을 거론하며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왕이 부장은 이날 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 북한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현재의 복잡한 정세에 대응하며, 핵 문제의 협상 궤도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힘.
 - 왕 부장이 기존 북핵 3원칙과 협상 궤도로의 복귀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중심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윤병세 장관, 中, 북핵불용 행동으로 보여야 허언 아니다(1/10,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이번 기회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힘.
 - 윤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이 그동안 약속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허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함.
 - 윤 장관은 지난 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강력한 내용의 결의가 신속히 채택되도록 한중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한 데 이어 대북 추가제재 과정에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으로 풀이됨.

다. 한·일 관계

- 미주·유럽서 위안부 합의 규탄 연대 집회(1/7, 연합뉴스)
 -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의 철회 및 원천무효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림.
 - 독일 베를린 한국대사관 앞에선 이날 낮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주도로 교포와 활동가 30명이 모여 이번 합의를 “피해자 동의 없는 밀실협약”이라고 규정하고 한국 정부에 파기를 요구했음. 이들은 이어 일본대사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협상 폐기, 전쟁 성범죄 인정과 참회 및 배상을 거듭 촉구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역시 중단하라고 지적함.
 - ‘희망세상뉴욕모임’ 소속 시민 10여 명은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굴욕적인 매국협상 위안부 합의 철회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든 채 “일본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전시 성폭력을 행사하고도 역사에서 이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아베, 위안부합의 인도적·정치적 여러견해 있지만 완전 해결(1/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합의의 성격에 관해 “인도적 견지인가 정치적 견지인가 등 여러 견해가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언급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으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완료됐다는 입장은 이번 합의로 어떤 변경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합의를 근거로 양국이 힘을 합해 일한 신시대를 개척하고 싶다.”고 강조하였음.
 - 아베 총리 등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8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이번 합의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교도, 박 대통령, 일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에 기대 표명(1/7,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국제사회에서 강한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과 연대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아베 총리는 “긴밀하게 연대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을 포함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싶다.”며 “일본·미국·한국의 안전보장협력이 한층 중요해진다.”고 발언했다고 전해짐.
-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통화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각각 “올해를 한일 새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박 대통령),” “일한 새 시대가 시작하는 해(아베 총리)”라고 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함.

■ 日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체결 추진(1/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에 의욕을 보임.
- 교도통신에 의하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7일 기자회견에 나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副)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면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류됐던 사안임. 한편, 하기우다는 군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일·한, 일·미·한의 안보 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 한일 국방장관 北핵실험 대응 전화·대북공조 합의(1/8,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의 국방장관이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양국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오늘 오후 9시 40분 전화 통화로 북한 핵실험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두 사람은 작년 5월과 10월 직접 만나 회담을 한 적은 있음. 국방부는 “(이번 전화 통화에서) 한일 국방장관은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함.
-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해석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사전통보 못받은 美·中, 긴급 북핵 협의…대북제재 수위 촉각(1/7,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에 따른 후속 대응조치를 놓고 긴급 협의에 착수함. 한반도 주변 질서를 좌우하는 ‘주요 2개국(G2)’이 이번 사태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조율해나가는가에 따라 대북 제재의 수위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낮 백악관에서 회동해 이번 사태를 놓고 긴밀히 조율했다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밝힘.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간의 협의 여부를 묻는 말에 “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은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낮 라이스 보좌관과 추이 대사가 협의를 마쳤다.”고 소개하였음.
 -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이 긴급 협의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봄.
- 中, 대북접근법 바뀌어야…韓美日 등 국제사회 중국 압박(1/8, 연합뉴스)
 -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해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촉구한 데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8일 오후 왕이 부장과 통화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고, 일본 역시 중국과의 전화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짐.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 파장과 관련,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함. 윤병세 장관은 왕이 부장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교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 등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美-필리핀-베트남, 남중국해 군사·외교공조 강화 재걸음(1/8, 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도서에 지은 인공시설물의 가동에 나서자 미국과 필리핀, 베트남이 반발하며 군사·외교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오는 12일 미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와 국방 수장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열어 남중국해 사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이번 회담은 중국이 지난 2일과 6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썬영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용수자오<永暑礁>)를 메운 인공섬의 활주로에서 민항 여객기 이착륙 시험을 한 직후 개최되는 것으로, 미국과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의 시설을 본격 가동해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으로 알려짐.

- 중국학자들, 美-中 연합 군사작전해 북한 공격하자 주장(1/8, 연합뉴스)
 - 중국학자들이 최근 4차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연합 군사작전으로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음.
 - 마카오의 군사전략 전문가 장강(張綱)은 “중국은 북한 유화 정책에 실패해 북핵 문제 해결에 속수무책”이라면서 “중국과 미국이 연합해 북한에 ‘외과수술식 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원(博迅)이 7일 보도함.
 - 중국 잡지 ‘중국개혁’ 사장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 초빙 학자인 리웨이둥(李偉東)은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한국·미국·중국·일본이 러시아의 양해 아래 연합군을 구성해 북한을 공격하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군사적 수단을 제안함. 리웨이둥은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중국이 북한에 민주화를 이룩한다는 전제아래 북한을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中대북접근법 실패론에 美-中 갈등…中 북핵, 우리 잘못아냐(1/8,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대북접근이 쓸모없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도(한반도) 핵문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매듭’을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음.
 - 또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아니다.”며 중국은 한결같이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관련 국가들의 합리적 우려를 적절하게 해결해 한반도의

- 장기적 안정을 위한 ‘근본적 정책’을 실현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 케리 장관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과장과 관련, 왕이(王毅) 중국 외교 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짐.

바. 미·일 관계

- 백악관, 오바마, 日에 위안부문제 해결 조치 독려·촉구(1/6,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타결된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짐.
 - 5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 2일 오바마 대통령의 겨울 휴가지인 하와이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물밑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힘.
 - 이는 지난해 4월 방한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도 사실상 일본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추측됨.
- 오바마, 北 핵실험, 국제사회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1/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해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긴급 통화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함.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이 긴밀히 연대해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 양국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해짐.
- 日 여당간부 이달 방미…북핵·납치문제 공동대응 모색(1/10, 연합뉴스)
 - 일본 자민당 간부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양국 간 공동 대응 및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NHK가 10일 전했다.

- 미국을 찾는 간부는 납치문제담당상(장관)을 역임한 후루야 게이시(古屋圭司) 당 납치문제대책본부장임.
- 후루야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과 두루 만나 국제사회가 단결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핵 문제뿐 아니라 납치·미사일 문제도 포함해 포괄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짐.

사. 미·러 관계

- 미국방부, 러시아가 미국을 위협으로 지목할 이유 없어(1/5,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세력 확장과 미국을 러시아 안보의 주된 위협으로 지목하는 안보전략 문건에 구랍 31일 서명하였음.
 -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제프 데이비스 대위는 4일(현지시간) 취재진에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러시아와 분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또한, 데이비스 대위는 “미국과 러시아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러시아의 위협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궁극적으로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과 만나 의견을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아. 중·일 관계

- 중국, 최신 정보함 잇따라 취역…미국 긴장(1/6, 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마찰을 빚어온 중국이 최신예 정보함을 잇따라 취역해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미국의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지난달 26일 남중국해의 한 부대에서 자체 개발한 815A형 정보함 하이왕싱(海王星, 852함)의 취역식을 가졌다. 군 기관지 인민해방군보는 하이왕싱함이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특정 범위 내에서 다양한 표적을 전천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고 전함.
 - 한편, 중국 해군 정보함의 활동 증가와 관련해 제임스 미 해군 대변인(대령)은 “중국의 관련 함정(남중국해) 배치는 국제법상의 항행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원론적인 견해를 밝힘.

- 中 기관포 해경선 센카쿠 진입…새해벽두부터 영유권 행보(1/9,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12해리 이내 해역에 기관포가 탑재된 무장 해경선을 진입시키는 등 새해벽두부터 영유권 강화 행보에 나섰다.
 - 관영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9일 국가해양국을 인용, “중국 해경선 2401호, 31241호 편대가 지난 8일 댜오위다오 영내에서 순찰 활동을 했다.”며 “중국 해경선이 댜오위다오 12해리 이내를 순찰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보도함.
 -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관포로 보이는 무기를 장착한 중국 해경선이 지난달 22일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을 운항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센카쿠 영해’에 진입했음. 한편, 중국 해경선이 무장한 채 일본 해역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고 일본 해경 당국이 밝힘.

- 日 자위대機 남중국해 비행 확대 검토…중국과 갈등 예고(1/10, 연합뉴스)
 -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현재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해적 대책 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 P3C 초계기의 일본 귀환 루트를 수정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이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의 기지를 경유하기로 함.
 - 일본의 비행 확대는 미군이 남중국해 상의 중국 인공섬 주변에서 실시하는 순시활동을 일본이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인공섬 건설을 통해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려는 중국을, ‘법의 지배’를 내세워 견제함으로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일본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히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 일본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달리 이곳을 공해로 보는 만큼 ‘공해 상공에서의 비행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앞으로 고도의 감시능력을 갖고 있는 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남중국해 주변으로 비행할 경우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돼 추이가 주목됨.

자. 중·러 관계

- 러·중, 북 핵실험은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공감(1/8,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은 수소폭탄 실험을 주장한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8일(현지시간) 밝힘.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우다웨이(武

- 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같이 소개하였음.
- 보도문은 “북한의 행동이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고 한반도 지역의 군사·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하며, 6자회담 러, 중 수석대표인 모르굴로프와 우다웨이는 또 한반도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해외식당 접대원 무임금 노동(1/7, 자유아시아방송)
 - 화려한 춤과 노래, 친절한 봉사를 무기로 현지 손님을 유치하고 있는 해외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대부분 노동에 대한 대가(임금)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소재 북한 식당들의 종업원들은 대부분 평양소재 대학의 학생들과 졸업생들이므로 파악되고 있음.
 - 중국 변경도시의 북한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20대 초반의 여성은 “우리는 모두 실습생으로 여기 와서 일하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않는다”면서 “장학금 조로 생활비를 조금 받고 있다”고 귀띔했음.
 - 이 여성은 또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봉사원은 실습생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1년도 될 수 있고 길어지면 3년도 될 수 있다”고 말했음.
 - “실습을 나오는 시기는 학교(대학)를 마치고 나오기도 하고 재학 중에 나오기도 한다”고 밝힌 이 여성은 “어찌 되었거나 실습을 해야지만 정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평양의 한 주민 소식통은 “평양 상업대학 출신들을 실습생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하게 된 이유는 해외식당 파견에 선발되는 것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이 같은 이유로 해외식당 파견 지원자가 수요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특정대학 학생들을 실습이라는 명분으로 파견하고 있다는 것임.
- 북 외화벌이 노동자 좌불안석(1/8,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에 파견되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불똥이 자신들에 튈 것을 우려해 숨죽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북한 근로자들은 정식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취업자들이기 때문임.

- 중국 변경도시의 한 대북소식통은 “지금 상황이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그 당시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북한의 (불법)근로자들이 중국을 떠나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고 말했다.
 -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이 정식 취업비자가 없는 북한 근로자들을 찾아내 추방조치를 취했던 것임.
 - 소식통은 “2013년 핵실험 직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이번 4차 핵실험 강행 소식에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인 업주들 역시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식당 종업원들도 상당수가 정식 노동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많은 식당종업원들이 북한에 돌아가야 했었다”고 밝혔다.
 -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 중 정식으로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을 들락거리며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단둥과 연변 등 변경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 현행 ‘북-중 비자면제’ 제도에 따르면 공무여권을 가진 양국의 국민은 비자 없이 상대국에서 30일을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북한당국은 중국에 근로자들을 파견하면서 이 비자면제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공무여권을 발급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귀국했다가 다시 중국에 입국하는 식으로 편법 취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임.
 - 중국 공안당국도 이 같은 편법을 알면서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들 북한 근로자들을 언제든지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임.
- 북 주민, ‘제2의 고난의 행군’ 우려(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단행한 것과 관련해 평양을 비롯한 일부 특권층들은 반기는 대신, 지방의 주민들은 비판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음.
 - 북한 소식통은 “핵실험을 발표하기 전에 당국은 전체 주민들에게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하라는 긴급 전화포치(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텔레비전을 보았다”고 밝혔다.
 - 이어 북한 중앙텔레비전에서 “수소탄시험에 완전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는 만세를 부르도록 간부들이 유도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임.

- 이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하기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적극 이용했다는 지적임.
- 그는 “평양을 비롯한 지방의 간부들은 수소탄 시험을 반기지만,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말했다.
- 평안북도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북한 소식통도 핵실험 이후 제재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일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평양 특권층을 중심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변화이고, 전반적인 주민들의 생활수준과는 거리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장마당을 이용하는 주민은 하루 100만~18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 남한의 대북인권단체에 따르면 2천400만 북한 인구 중 식량수급 대상자는 500만 명 수준으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극적인 장시를 해야 먹고 사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북한인권

-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탄력 받나...여야 논쟁 재점화(1/8, 연합뉴스)
 - 북한 핵실험 과장으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재점화 하고 있음.
 - 프랑스 파리 테러에 이어 핵실험까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자 일부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로 통과되지 못한 안보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 우선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테러방지법과 함께 이참에 북한인권법까지 통과를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시 시동을 걸었음.
 - 원유철 원내대표는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실험으로 우리나라가 안보상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야당은 아직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저급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음.
 -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두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는 문제나 북한인권법으로 남북관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는데 국민이 찬성하겠느냐”면서 “협상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합의 사항을 발로 걷어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음.
- 더불어민주당은 테러 대응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여기에 국정원 파견이 아닌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 국정원과는 별개로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인권 탄압 실태 고발” 24km 떨어진 곳에서도 소리 들려(1/8, 전자신문)
 - 1월 8일 정오를 기점으로 지난해 남북 간 ‘8·25 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4개월여 만에 재개됨.
 - 방송에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과 북한 인권 탄압 실태 등에 대한 고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음.
 - 이날 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는 대북 심리전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음.
 - 출력을 최대한 높이면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km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 전해졌음.

3. 탈북자

-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자 1277명…김정은 체제 후 급감(1/4, 미국의소리)
 -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모두 1천277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음.
 - 이는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2011년 한 해 동안 기록한 2천70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임.
 - 김정은 체제 들어서 탈북자 수가 줄어든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국경 단속과 감시가 강화된 때문으로 풀이됨.
 - 또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자 가운데 여성은 1천25명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했음.
 - 여성 비율이 8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임.
- 전 김정일 경호원, 다음달 제네바 인권회의 증언(1/6, 미국의소리)

- 북한에서 11년 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을 지낸 탈북자 이영국 씨가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인권회의에서 증언함.
 - 지난 2009년 시작된 연례 국제 인권회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8회 째를 맞는 올해 회의가 다음달 23일 열린다며, 지금까지 참석이 확정된 6명의 연사 가운데 탈북자 이영국 씨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기구 ‘유엔 워치’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인권재단’ 등 20여개 국제 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 연례회의에서 탈북자가 연설하는 것은 이 씨가 8번째임.
 - 지난해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출신 탈북자 임일 씨와 탈북 대학생 박연미 씨가 북한인권 실태를 증언했음.
 - 또 2014년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가 참석했고, 이보다 앞서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정광일 씨, 강철환 씨, 그리고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주일 씨가 참석했음.
 - 이영국 씨는 1978년부터 1988년까지 11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원으로 근무했음.
 - 지난 1994년 중국으로 탈출한 이 씨는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됐고, 북한으로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 5년 간 수감됐었음.
 - 이후 1999년에 요덕관리소에서 기적적으로 출소한 이 씨는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고, 이듬해인 2000년에 한국에 입국했음.
 - 이 씨는 2002년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나는 김정일 경호원이었다’ 를 펴냈고, 지난해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활을 전하는 실화소설 ‘김정일 경호원이 말하는 정치범 수용소 요덕’을 출판하기도 했음.
- 미 입국 탈북난민 총 192명(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가 8일 발표한 최신 난민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음.
 - 지난해 1월부터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4명임.
 -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총 192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음.
 -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탈북 난민 첫 정착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중 가장 많은 6명이 유타 주에 정착했음.

- 이어 콜로라도 주와 켄터키 주, 일리노이 주에 각각 두 명씩,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와 조지아 주에 각각 한 명씩 등지를 틀었음.
- 한편,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가 정착한 3개 주는 켄터키 주(26명)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25명), 뉴욕 주(19명) 순서임.
- 이외에도 콜로라도 주(18명), 유타 주(16명) 그리고 애리조나 주와 버지니아 주(각각 15명) 등에 많은 탈북자가 정착했음.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호주 정부, 2016년도 대북 식량지원에 220만 달러 기부(1/5, 노컷뉴스)
 - 호주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의 2016년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220만 달러를 기부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31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22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음.
 - 호주 외교부(DFAT) 대변인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이 같은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음.
 -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평균 4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해 왔다”고 밝혔음.
 - 호주는 지난해에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230만 달러를 기부했음.

-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호주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현지 영양과자공장과 혼합가공식품공장에서 영양강화식품을 제조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음.
- 스위스, 올해 835만 달러 대북 지원 계획(1/5, 미국의소리)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는 1월 4일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830만 스위스 프랑, 미화 835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음.
 - 이는 지난해 870만 달러를 집행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임.
 - 올해 예산은 공공보건 사업에 765만 달러, 식량안보 사업에 67만 달러, 비정부기구 지원 사업에 5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음.
 - 개발협력처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수도와 위생 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음.
 -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천50t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지원한 바 있음.
 - 또 북한 내 수도와 위생 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산간 지역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 사업에 12만 달러, 병충해 방제 사업에 16만 달러를 지원했음.
 - 특히 이 병충해 방제기술 지원 사업은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협력해 올해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임.
- WFP 지난해 대북 식량 지원, 19년 만에 최저(1/6, 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1월 5일 지난 12월 북한 취약계층 70만9천여 명에게 2천343t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음.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을 모두 합하면 2만4천561t으로, 1996년 이후 19년 사이에 가장 적은 규모임.
 - 이 같은 수치는 특히 18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던 2014년 2만7천 204t보다도 2천643t 줄어든 것임.

-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은 지난 1995년 5천140t으로 시작해 1996년 5만4천여t으로 늘었고, 1997년에는 43만2천여t으로 급격히 증가했음.
 - 이후 2001년에 사상 최대인 93만여t을 기록한 뒤 2002년엔 37만으로 줄고, 2005년까지 30만t 수준에 머물다 2008년13만6천t, 2010년 5만여t으로 크게 줄었음.
 -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이 감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공장 가운데 5곳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임.
 - 또 매달 180만여 명의 북한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5년 실제 지원을 받은 북한 주민은 평균 69만 8천여 명으로 목표의 3분의 1수준이었음.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2015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2016년 6월까지 연장했음.
- 정부 “남북 민간교류·대북지원 당분간 미뤄질 상황”(1/7, 연합뉴스)
- 정부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조치다.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협력사업 등은 당분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미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도 중단되느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천207명이 체류하고 있음.
 - 그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 “많게는 (하루 단위 체류 인원) 100여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3차 핵실험 때도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조금씩 줄였다”고 설명했다.

- 이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입주기업은) 해외 바이어들을 제일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도 관문점 남북 연락관 채널은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 북한동향

- 새누리당의 '북인권법' 제정 추진(2015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송년음악회 개최 등에 대해 “북남 관계 개선의 전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는 반통일적,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고 중단 주장(1.5, 중앙방송 노동신문/대결야망이 비긴 북인권법 조작소동)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